

# 대법원 2024도764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현직 부산광역시교육감인 피고인 1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이하 '이 사건 포럼')을 설치하고, ②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교육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사건 포럼을 이용하여 피고인 1의 교육감 당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③ 피고인 1이 교육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가 아닌 변경된 현재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명칭을 기재하여 피고인 1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④ 피고인 1이 교육감 선거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하고, ⑤ 피고인 5가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해준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교육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2024. 12. 12.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2에 대한 ①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7642 판결)

## 1. 사안의 개요

### 가. 당사자들의 지위

- ▣ 피고인 1 ⇒ 2022. 6. 1. 제8회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
- ▣ 피고인 2 ⇒ 이 사건 포럼 공동대표이자 총괄선거대책본부장

- 피고인 3 ⇒ 이 사건 포럼의 사무국장이자 선거사무소 사무장
- 피고인 4 ⇒ 이 사건 포럼의 사무부총장이자 선거사무소 사무부총장
- 피고인 5 ⇒ 이 사건 포럼의 공동대표이자 선거사무소 사무총장

## 나. 공소사실의 요지

### (1) 피고인들 공동범행

- 선거사무소 등 유사기관 설치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6. 16.경부터 2022. 1. 하순경까지 피고인 1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인 이 사건 포럼을 설치함
- 유사기관 활동 제한규정 위반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포럼을 이용하여 피고인 1의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 내용과 사진 등을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고, 이 사건 포럼 회원들을 통하여 홍보물을 전파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피고인 1의 교육감 당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교육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포럼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

### (2) 피고인 1 단독범행

- 허위사실공표
  - 피고인 1은 1981. 2. 13. '남해종합고등학교', 1986. 2. 21. '부산산업대학교'를 졸업하였는데도, 2022. 5. 중순경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남해제일고등학교'<sup>1)</sup>와 '경성대학교'<sup>2)</sup>를 졸업하였다고 기재하여 피고인 1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함
-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
  - 피고인 1은 2022. 2. 17.경 교육감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인 부산한부

1) 1999. 3. 5.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남해여자고등학교 통폐합

2) 1988. 5. 1. 교명 변경

모가족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협의회 대표에게 피고인 1의 저서 '교육강국 대한민국 교육 10년의 길' 5권을 교부하는 기부행위를 함

### (3) 피고인 5 단독범행

#### ■ 매수 및 이해유도

- 피고인 5는 2022. 6. 1.경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해준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각 200만 원, 7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

#### ■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

- 피고인 5는 2022. 5. 27.경 공표 여론조사가 아닌 여론조사 결과를 '마지막 공표 여론조사 압도적 승리'라는 문구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기재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피고인 1의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함으로써, 교육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함

## 2. 소송경과

### 가. 제1심 ➡ 피고인들 전부 유죄

- 피고인 1 ⇒ 벌금 700만 원
- 피고인 2 ⇒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3 ⇒ 벌금 400만 원
- 피고인 4 ⇒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5 ⇒ 벌금 500만 원

### 나. 원심 ➡ 피고인 2에 대한 유사기관 설치 부분 무죄, 나머지 유죄

- 피고인 1 ⇒ 벌금 700만 원
- 피고인 2 ⇒ 일부 무죄, 벌금 200만 원
- 피고인 3 ⇒ 벌금 400만 원

▣ 피고인 4 ⇒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5 ⇒ 벌금 500만 원

## 다. 원심의 유·무죄 판단 이유

▣ 피고인 1, 3, 4, 5의 유사기관 설치 부분 - 유죄

- 이 사건 포럼은, 피고인 1을 교육감 선거 단일 후보로 선출되도록 하여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기관으로서 그 목적의사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외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2021. 6. 16. 창립 당시부터 이 사건 포럼에 참여하였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피고인 1을 홍보하고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인 2의 유사기관 설치 부분 - 무죄

- 유사기관 설치 범행은 범행상태의 시간적 계속을 요하지 않는 범죄이므로, 설치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임
- 피고인 2는 유사기관 설치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인 2021. 7. 말경 이 사건 포럼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미 기수에 이른 유사기관 설치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음

▣ 피고인들의 유사기관 활동 제한규정 위반 부분 - 유죄

- 이 사건 포럼이 개최한 각 행사는 피고인 1이 교육감 선거의 중도보수 단일 후보로 선정될 무렵 교육감 선거와 동일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므로, 교육감 선거에서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포럼이 운영하는 SNS 계정이나 이 사건 포럼 회원들의 SNS 계정을 통하여 게시한 홍보물은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 1의 허위사실공표 부분 - 유죄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은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후보자의 학교명 게재 방식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음
- 졸업 당시와 변경된 이후 학교의 실질을 고려하여 그 실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졸업 당시의 학교명이 아닌 변경된 학교명을 기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피고인 1이 졸업한 학교와 변경 후의 학교가 그 실질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졸업 당시의 학교명이 아닌 변경된 학교명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인 피고인 1의 학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내용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이 선거공보 등에 기재된 학교명을 알고서도 배포되도록 한 이상 피고인 1에게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 피고인 5의 매수 및 이해유도,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 부분 - 유죄

- 피고인 5가 용역비나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 5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교육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였음

### 3. 대법원의 판단

#### 가. 쟁점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 설치 범행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 ▣ 피고인들이 유사기관 설치 이후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 법원의 석명 의무 위반 여부
- ▣ 피고인 1이 졸업 당시 기준으로 변경된 학교 명칭을 기재한 행위가 허위 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판결 결과

- ▣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원심 수긍)

## 다. 판단 내용

- ▣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는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
  -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즉시범, 포괄일죄,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음
- ▣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위의 사실', '당선될 목적', '허위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